# 심리상담사 국가인증 법안 대책 마련해야

**심리상담사 국가인증 법안 추진**
**전공으로 제한, 민간자격증 위법**
**불교계 심리상담 활동 중단해야**
**법제화 전 불교계 대책마련 시급**

**한국불교상담학회, 관련 간담회서**
**교계 입장 대변·종교분과 참석해**
**"종교 심리치유 특수성 인정해야"**
**"기존 심리상담 구제 방안 있어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심리상담사의 자격을 국가가 인증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불교계 심리상담 관련기간과 학회들이 위법단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불교상담학회는 지난 8월 9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담회에 참석해 종교분과의 의견 조율에 참여했다. 간담회는 심리서비스 개념, 범위와 영역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한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성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국심리상담관련단체협의회 소속 종교분과인 한국불교상담학회, 한국목회상담협회, 한국카톨릭상담학회가 참여해 종교가 가진 심리상담 분야의 특별성을 강조하며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의 추진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심리상담사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14일에는 정의당도 '상담사법안' 을 발의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되고 있는 심리상담 관련 법안은 민간자격증이 남발되고 있어 국가시험 제도로 자격을 부여해 상담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0년부터 입법연구가 시작됐다. 현재 우리나라 심리상담사 활동은 자격증 남발로 인해 자격미달의 상담사들이 양산되고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번 법안 추진의 명분은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의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상담기관 및 명상상담센터는 '불법기관' 이 될 수밖에 없어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심리상담을 통한 전법과 포교활동 자체가 '위법' 으로 몰려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법안의 심리상담 관련 국가시험은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한국불교상담학회는 8월 9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심리상담사 자격 국가인증 법안과 관련해 종교분과의 의견 조율에 참여했다. 사진은 풍경소리의 명상심리 지도사 2급 과정 교육 현장 모습.

대학 · 대학원에서 상담학 ·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심리사 자격 취득 요건과 관련해 "심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거나,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다른 법안에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 대학이나 교육부 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을 심리상담사 시험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안양규 회장은 먼저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법안의 발의로 인해 불교계 상담활동이 위축되고 불법화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안 회장은 "불교계 상담사를 비롯한 현재 상담사들을 고려해 법안이 제정되어한다. 특히 종교분과 심리상담은 종교라는 테두리 속에 상담 범주가 포함되기에 구분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종교가 가진 심리 치유 방향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며 손쉽게 대중에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드시 불교계를 비롯한 기존 상담사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상담사 자격 취득 과정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안 회장은 "상담 관련 대학교의 상황이 각기 다르다.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에서 시행하는 취득과정은 현실성이 있다. 모델로 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현실성 있는 취득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종단과 불교계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학술대회를 열어 사안의 중요성을 알려 불교계 상담기관과 종단에 긴밀한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며, "무엇보다 종단 차원의 대책과 불교계 자체의 법안 발의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교계 심리상담 자격취득자는 불교상담개발원의 불교상담심리사 535명을 포함해 1500여 명이다.

## 부산 자비암, 이웃돕기 성품 전달

**마스크 3500매 양말 5000개**



부산 마안산 자비암(주지 자관)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청에서 이웃돕기 성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자비암은 전달식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마스크 3500매와 양말 5000켤레를 기탁했다. 성품은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며 몸이 불편한 시설 이용자들에게 전달된다.

주지 자관 스님은 "무더운 여름철이라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며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더워도 코로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성품을 지원해주신 자비암 주지 자관 스님과 신도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관내의 거동이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통도사 대광명전서 '물감그릇' 발견

**후불벽 기둥 상부 주두서 발견돼**
**채색 후 잊고 내려온 것으로 추정**
**전통 안료 그대로 굳은 채로 발견**
**안료·조색방법 등 연구 가치 있어**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대광명전에서 조선시대 후기 백자 분청 채기(彩器, 물감그릇)가 발견됐다.〈사진〉 이번에 발견된 채기는 경주 안압지에서 발견된 이후 두 번째이며, 전통 안료가 그대로 굳은 채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8월 9일 통도사 종무소 및 대광명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채기가 가진 역사적 중요성을 설명했다.

채기는 대광명전 후불벽 기둥 상부 주두에 얹혀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통도사는 현재 시행 중인 단청기록화조사사업을 시행하는 중이다. 통도사 단청기록화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구본능 도화원 대표가 최초 발견했다. 구 대표는 "단청 작업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진행한다. 처음에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두었다가 채색 후에 깜빡하고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물관장 송천 스님은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은 단청용 채색을 통해 중수 당시의 단청에 사용된 안료와 조색방법, 물감의 사용방법 등을 직 ·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그릇 자체만으로도 통도사가 위치한 양산지역의 조선 후기 유행한 도자기 유형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채색 그릇에 남아 있는 잔존 물감이 지금 벽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똑같으며 원소기호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통도사는 발견 직후 전문기관을 통해 채기 속의 안료 성분이 대광명전 단청 안료와 같은 성분임을 확인했다. 채기의 크기는 직경 15cm, 높이 7.5cm, 굽의 직경이 5.5cm로 조선 후기 백자분청사발에 속하며, 조선 후기 막사발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채기에 담겨 있는 안료를 통해 대광명전 중수 당시의 단청에 사용된 안료와 조색방법, 물감의 사용방법 등을 직 ·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채기가 발견된 통도사 대광명전은 통도사 중로전의 중심 전각이며 보물로 지정되어있다. 〈통도사약지〉에 의하면 창건 당시부터 있었던 건축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의 건물은 〈통도사지〉에 기록된 〈기묘년개금탱화단확사시주기〉에 전내의 후불탱화와 단청, 본존불의 개금이 1759년에 조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1759년 직전에 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청은 1759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뤄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릇의 상태가 완형으로 양호하고 1759년이라는 절대연도를 가지고 있어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생명나눔부산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업무협약

**양 기관 주요사업 협력 약정**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가 8월 4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기기증희망등록 · 자살예방 캠페인 · 사전연명의료등록사업 업무협약식' 을 개최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자살예방 캠페인을 비롯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등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의 주요사업에 동참하고 장소 협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날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직원 20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서약해 의미를 더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앞으로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 지원하는 소외계층의 난치병 환우 돕기 치료비 지원을 약정했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명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양 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며 "협약을 통해 부산 불교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강렬 개금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에서 활동하는 많은 불교복지기관들이 생명나눔 부산지역본부의 생명 존중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영축문화대상 후보 모집

**마감 10월 30일, 시상 12월 4일**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이 제10회 영축문화대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영축문화대상 시상 부문은 봉사(실천)상, 학술(문화)상, 포교(원력)상 각 1명이며 각 부분별로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추천 후보는 국적, 연령, 성별, 직업, 학력, 종교에 구분이 없으며, 해당 분야에 수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단체), 동종의 공적으로 정부 관련 포상을 받은 경우 5년 이상 경과한 자(단체), 승려일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 제한한다.

추천권자는 소속기관, 기업(단체)대표, 대학 학과장, 후원(봉사)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재적사찰 주지 또는 기관장이다. 후보자 추천 서식은 영축문화재단과 통도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우편 접수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월평1길 24로 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10월 30일까지이며, 수상자 발표는 12월 1일 교계언론에 게재하고 개별통지한다. 시상식은 12월 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월하 대종사 열반 제19주기 추모다례재 후 진행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